

25-01(통권 980호) 2025.01.17

경제주평

■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

목 차

■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25년 글로벌 트렌드	2
① 계산의 시간	2
② 글로벌 관세전쟁의 시작	5
③ 미국, 경제적 예외주의의 시대	8
④ 다시 시작된 부채(負債)질	10
⑤ 새로운 패권경쟁, AI	12
3. 2025년 국내 트렌드	15
① 한반도 긴장 속 군비경쟁 심화	15
② 부(負)의 정치적 경기사이클 시작	17
③ 인내하는 소비자들	20
④ 주택임대차 시장의 재편	22
⑤ 진격의 메이드 인 K	24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해 정 수 석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이 택 근 연 구 위 원 (2072-6366, tklee@hri.co.kr)
신 지 영 연 구 위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강 성 현 선 임 연 구 원 (2072-6221, shkang@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격동의 글로벌 정세 속 혼돈의 국내 여건

■ 개 요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국내외 정치, 경제는 물론 산업·기술,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2025년 새롭게 주목받거나,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현상을 중심으로 국내외 각각 5개씩 10대 트렌드를 선정했다. 글로벌 트렌드는 정치 분야에서 '계산의 시간',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의 시작', '미국, 경제적 예외주의의 시대', '다시 시작된 부채(負債)질', 산업·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패권경쟁, AI'를 선정했다. 국내 트렌드는 정치 분야에서 '한반도 긴장 속 군비경쟁 심화', '부(負)의 정치적 경기사이클 시작', 경제 분야에서 '인내하는 소비자들', 산업 분야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재편', 사회·문화 분야에서 '진격의 메이드 인 K'를 선정했다.

■ 2025년 글로벌 트렌드

① 계산의 시간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귀환과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가능성은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며 각국의 안보 및 경제 전략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강화해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1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핵심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동맹국에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군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통해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공고히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 갈등은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접근은 약소국의 외교 대응력을 약화시켜 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거래지향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자·양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용 청구와 외교적 요구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글로벌 관세전쟁의 시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세계 각국의 연쇄적인 관세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에도 큰 피해를 유발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對 중국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축소는 물론 공급망 정책을 통해 FDI 유입 규모 확대라는 성과를 취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을 제외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對 중국 관세인상 조치가 시작된 2018년 대비 2019년 對 중국 수입은 873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36억 달러 축소되었다. 또, 조세 감면이나 공장부지 제공 등의 인센티브 중심의 공급망 정책으로 FDI 유입 규모도 2017년 약 4조 달러에서 2020년 약 4.6조 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경험을 살려 무차별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익 추구는 물론 대외 군사·외교·안보 등 타 분야 정책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부문에서는 상호무역법 제정, 보편관세 도입, 對 중국 관세 강화, 무역협정 재협상 등과 같은 상대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인 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예고된 통상정책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보복관세를 비롯한 각국의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영국-프랑스, 프랑스-이탈리아, 미국-캐나다 간 관세전쟁은 무역 감소, 물가 급등 등 상호 경제적 피해를 유발해 세계적인 불화의 장기화를 가져 왔다. 또,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 제정을 통해 2만여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각국의 보복관세와 수입제한, 환율통제 등을 유발하는 등 전 세계적 갈등을 유발하고 대공황 심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는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민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추진이 필요하다.**

③ 미국, 경제적 예외주의(American Economic Exceptionalism)의 시대

세계 경제 둔화에도 나홀로 성장세를 유지한 미국의 '경제적 예외주의' 개념이 재부각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2025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경제적 독주로 미국과 非미국 국가 간 경기 차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으로 그 현상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미국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이 부진했던 것과 달리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 모두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잠재성장률(2%)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2.8%)을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1.8%), G7(1.7%)의 평균적 성장 수준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도 미국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 개인소비지출, 민간투자 등 내수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非미국 주요국 내수가 부진했던 점과 크게 대조된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도 강달러, 주식시장 호조 등 미국의 독주가 관찰되었다. **한편,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로 향후 미국 경기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非미국 국가들과의 경제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 친성장 정책 등으로 미국 경기는 호조세가 전망되지만,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인 중국

은 미약한 내수, 미·중 갈등 가능성 등 여건상 성장 둔화가 전망된다. 또한, 세계 수입 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미국과 非미국간의 경제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미국의 경제적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새롭게 개편될 글로벌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시장과 관련된 신규 투자처 등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④ 다시 시작된 부채(負債)질

주요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부채가 재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 시대에 감소하였던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여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향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 감소하였던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의 부채 비율이 조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기로 진입함에 따라 신흥국의 부채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부채의 증가세는 경제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글로벌 부채 리스크의 국내 전이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부채 수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새로운 패권경쟁, AI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윤리, 안정성 등 다방면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패권경쟁 이슈로 부상했다. 딥페이크(deepfake),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자율주행 오류, 산업로봇의 노동재해 유발, 자율살상무기의 테러 및 군사적 활용 등 AI의 오남용이나 설계 오류 등에 의한 개인적·사회적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동력이자 안보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으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AI 패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 중이며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6년 'AI의 미래에 대비'에서 2024년 '첨단 AI모델 및 컴퓨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보고 요구사항'까지 총 13개의 전략과 법안 및 행정명령을 통해 AI 패권 유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차세대 인공지능산업발전촉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년),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과기프로젝트 등의 국가전략을 통해 AI 관련 글로벌 경쟁 우위 선점을 노

리고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2017년에, 영국과 독일은 2021년에, 일본은 2022년에 국가 AI 전략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이다. 한편, 국가별 AI 경쟁력은 미국이 압도적인 1위로 중국 등이 추격 중이다. 2024년 현재 미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1위로 2위인 중국(미국 100 기준 54)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글로벌 100대 비상장 AI 기업도 69개로 압도적 1위다. 향후, 글로벌 AI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40~55%씩 성장해 최대 9,9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4년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이니셔티브 발휘로 경제·사회적 측면은 물론 군사·안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AI 경쟁력을 확보해 전략목표인 AI G3 국가 도약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 2025년 국내 트렌드

① 한반도 긴장 속 군비경쟁 심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한반도 내 군비경쟁 구도로 인해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북한은 우리의 국방중기계획과 유사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5년)'을 마무리하는 해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면서 현대전에 대한 전법, 작전, 정보, 과학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사대상 145개국 가운데 남한은 5위, 북한은 36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② 부(負)의 정치적 경기사이클 시작

국내 정치 혼란이 정책 여건의 악화와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악화를 유발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성장세 둔화를 야기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과 같은 부(負)의 정치 이벤트로 시장 기대가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1%대 성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경기는 제12 순환기가 진행 중으로 2022년 8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101.4로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수축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저점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기업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2024년 11월 대비 12월 각각

4.5p, 12.3p나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혼란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4년 12월 초 1,400원/달러 내외 수준에서 2025년 1월 중순에는 1,470원/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 이를 반영해 주요 IB들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탄핵정국 전인 2024년 11월 2.1%에서 2025년 1월 1.8%로 0.3%p 낮아졌다. 심지어는 1% 초반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부(負)의 정치 이벤트가 장기화될 경우 대내외 리스크 관리 실패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한 1%대 성장 고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정치 정상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대외 리스크 관리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③ 인내하는 소비자들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현재의 불황기를 견디기 위해 소비를 참는 소비자들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보상 심리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였던 시점에서 소비를 참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시기로 전환되었다. 부진한 소비 여건이 지속되면서 소비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필수재 중심의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이후 27개월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비 또한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기 회복세 지연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 수준, 실질임금 정체 등 소비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지속된 영향이다. 소비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를 참거나 식료품, 생필품 등 필수재 중심으로 소비하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확장·수축 국면의 소매판매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수축 국면의 소매판매 증가율 평균은 -1.9%로 확장 국면의 3.1%에서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및 오락, 취미, 경기용품의 소매판매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음식료품 및 차량연료의 소매판매는 확장·수축 국면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편으로 필수재 위주의 소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 개선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전반적인 소비 부진 속에 필수재 중심의 소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한 경제주체의 기대 개선, 가격 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한 실질 구매력 확충 노력 등이 필요하다.

④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재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거래에서 월세거래 중심으로 점차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오랫동안 전세거래가 주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월세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월세통합가격지수(24.11월 전국 102.8, 수도권 104.0) 또한 상승하는 중이다. 수요 측면에서 과거와 달리 전세거래보다 월세거래에 대한 거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 측면에서도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측면)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로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주택의 월세형태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사기사건 이후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국내외 주식, 가상화폐 등 금융자산 투자 증가로 아파트 시장도 보증부월세, 반전세 등과 같은 월세 계약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측면)** 최근 글로벌 부동산 기업들의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 신규진출 및 이미 국내에 진출한 투자기업들도 지속적으로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주거안정 정책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기업이 중심이 되는 민간장기임대주택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시장 선진화를 통해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약화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산업적 측면에서 건설시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장기임대주택 분야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진격의 메이드 인 K

전세계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가 콘텐츠를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전 세계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수출, 관광 등을 통해 국내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음악 및 영상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을 넘어 주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문화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2024년에도 K-drama의 글로벌 흥행, K-pop 아티스트의 빌보드 메인차트 진출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재확인되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 LCK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 등으로 출판, 게임 분야까지 문화 콘텐츠 전반에 한류가 확산하며 콘텐츠 산업 매출과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K-food, K-beauty 관련 기업의 매출과 수출이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류 콘텐츠와 소비 증가는 개별 기업의 실적을 넘어 거시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재 수출이 활성화될 경우 향후 수출 경기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 여행수지 적자 개선 등의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류 콘텐츠의 강세가 문화적 현상을 넘어 소비재 수출, 관광업 등 연관 산업까지 긍정적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지원,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개요

-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국내외 정치, 경제는 물론 산업·기술,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2025년 새롭게 주목받거나,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현상을 중심으로 국내외 각각 5개씩 10대 트렌드를 선정
- 글로벌 트렌드는 정치 분야에서 '계산의 시간',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관세전쟁의 시작', '미국, 경제적 예외주의의 시대', '다시 시작된 부채(負債)질', 산업·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패권경쟁, AI'를 선정
- 국내 트렌드는 정치 분야에서 '한반도 긴장 속 군비경쟁 심화', '부(負)의 정치적 경기사이클 시작', 경제 분야에서 '인내하는 소비자들', 산업 분야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재편', 사회·문화 분야에서 '진격의 메이드 인 K'를 선정

< 2025년 국내외 트렌드 >

분야	주제	내용	
글로벌	정치	1. 계산의 시간	▪ 트럼프 귀환과 미·중 패권경쟁 심화 가능성은 각국의 안보와 경제 전략 재조정을 요구
	경제	2. 글로벌 관세전쟁의 시작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가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의 불씨를 제공하는 한편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3. 미국, 경제적 예외주의의 시대	▪ 세계 경제 둔화에도 나홀로 성장세를 유지한 미국의 '경제적 예외주의' 개념이 재부각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
		4. 다시 시작된 부채(負債)질	▪ 주요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부채가 재상승할 가능성 확대
	산업·기술	5. 새로운 패권경쟁, AI	▪ AI가 국가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으며 新 패권경쟁 이슈로 부상
국내	정치	1. 한반도 긴장 속 군비경쟁 심화	▪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한반도 내 군비경쟁 구도로 안보 위협 우려 고조
		2. 부(負)의 정치적 경기사이클 시작	▪ 국내 정치 혼란이 정책여건 악화와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악화를 유발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 성장세 둔화를 야기
	경제	3. 인내하는 소비자들	▪ 경기 회복 지연으로 현재의 불황기를 견디기 위해 소비를 참는 소비자가 증가할 전망
	산업	4.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재편	▪ 월세거래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이 지속 증가,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재편
	사회·문화	5. 진격의 메이드 인 K	▪ 전세계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가 콘텐츠를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수출, 관광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

2. 2025년 글로벌 트렌드

① 계산의 시간

- (의미)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귀환과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가능성은 국제질서의 재편을 가속화하며 각국이 안보와 경제 전략을 재조정하도록 요구
 - 미국의 동맹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독자적 방어 체계 강화 압박을 받는 한편, 약소국은 심화된 위협과 불확실성 속에서 대외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
 -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한 다자적 해결 능력이 약화되면서 지역 분쟁과 군사적 긴장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
-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1기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대외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보다 공격적인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강력한 경제·군사적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 음
 - 경제적 패권 강화 : 보호무역주의와 동맹국 압박을 통한 미국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 군사적 패권 유지 : 자국의 국방비를 증액하는 한편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요구함으로써 군사력 강화 모색
 - 국제질서 재편 : 다자주의의 틀보다는 양자 관계 중심의 접근을 선호하며, 국제 협력 체계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도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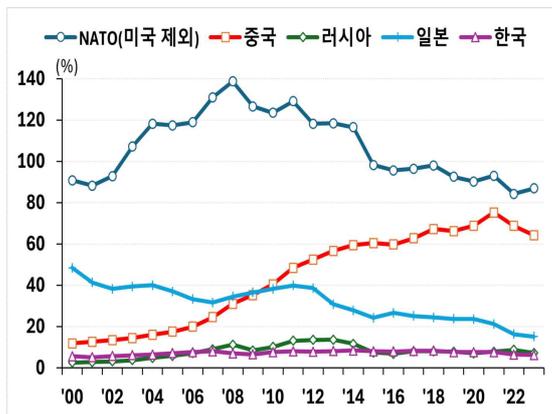
< 최근 미국 행정부의 주요 대외정책 기조 >

행정부	조지 W. 부시 (2001~2009)	버락 오바마 (2009~2017)	도널드 트럼프 1기 (2017~2021)	조 바이든 (2021~2025)	도널드 트럼프 2기 예상 (2025~2029)
캐치프라이즈	War on Terror	Rebalance to Asia-Pacific (Pivot to Asia)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	America is Back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
외교	일방주의 외교, 안보중심, 신보수주의 강조	다자주의 복귀, 아시아 중시, 민주주의 강조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 경제중심 양자 외교 선호	동맹 기반 다자주의 복원, 민주주의 강조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 심화, 제한적 다자협력 및 동맹 활용
군사	대테러전 중심, 국방비 증액 기조	아시아-태평양 초점, 국방비 감축 기조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국방비 증액 기조	인도-태평양 전략 중심, 국방비 증액 기조	인도-태평양 전략 심화, 국방비 증액 기조
대외경제	자유무역 강조,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 추진	자유무역과 국내 제조업 균형 모색, 다자주의 무역협정 추진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 강력한 보호무역 강조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첨단산업 보호)	강력한 보호무역 지속, 기술 패권 집중
미중관계	협력적 경쟁 관계 (경제협력+외교적대화 강화, 양안 등 일부 안보 갈등 존재)	협력-경쟁 병존 (경제 및 기후 협력 강화, 중국 부상 견제)	대립-경쟁 (무역전쟁 및 기술 안보 갈등 전면화)	전략적 경쟁 심화(안도체-기술), 제한적 협력(기후변화)	전면적 대립-경쟁 (무역전쟁+기술안보 패권 경쟁, 영토 및 인권 문제 개입)

자료 : 각종 언론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의 주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2기 외교는 1기와 유사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더욱 강경한 접근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음
 - 1기에서는 국내외적 저항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기에서는 정책 집행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됨
 - 2년 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은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방·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NATO와 같은 기존 동맹국들에 대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는 한편, 군사적 옵션을 동원하여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임
 - NATO 회원국이나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등 국방비 증액과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미국의 부담이 줄도록 할 것임
 - 또한,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온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대대적인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통해 기존 우위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임
 - 즉, 동맹국의 독립적인 군사적 역할을 강화시켜 미국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군사적 자원을 재분배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 등이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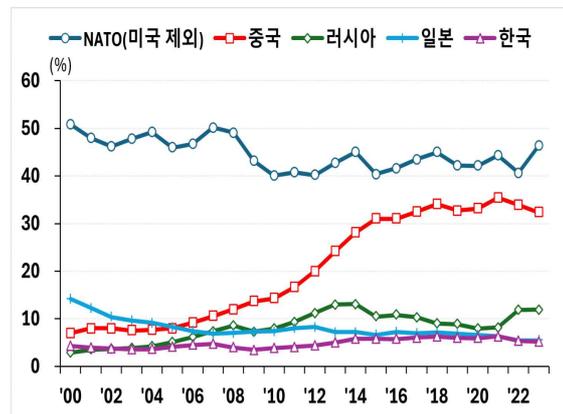
< 미국 대비 세계 주요국 GDP 비율 >



자료 : World Bank.

- 주1) 명목(USD) 기준 미국 GDP 대비 비율.
- 주2) NATO(미국 제외)는 해당연도에 NATO 회원국인 국가의 GDP를 합산하여 산출.

< 미국 대비 세계 주요국 국방비 비율 >



자료 : SIPRI.

- 주1) 명목(USD) 기준 미국 국방비 대비 비율.
- 주2) NATO(미국 제외)는 해당연도에 NATO 회원국인 국가의 국방비를 합산하여 산출.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하려고 하겠지만, 유럽과 중동에 산적한 분쟁들이 잠재적 위협으로 남게 될 가능성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등 국제 분쟁은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을 경우 잠재적인 화약고가 될 것임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성향은 약소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이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같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국 견제에만 치우치지 않고, 글로벌 분쟁 관리와 안보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국제분쟁 대응 전망 >

주요 국제분쟁	최근 당사국 입장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향(예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중전 협상 관련 점령지 합병 정당화 및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등 주장	우크라이나: 트럼프 당선 이후 영토 보전 보다 전후 안전 보장 중시 입장으로 변화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검토 -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신속한 휴전 추진 - 유럽 국가들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 요구 가능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중전 협상 관련 하마스 무력화와 인질 전원 석방, 가자지구발 안보 위협 해소 등 요구	하마스: 중전 협상 관련 영구적 휴전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등 요구	- 이스라엘에 강력한 지지 표명, 아브라함협정 정비 - 하마스와의 이란을 연계시켜 對이란 제재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시리아 내전	아사드 정권: 정권 붕괴 및 주요 거점 상실, 소규모 저항 지속	반군 세력(HTS 등): 시리아 내 과도 정부 구성 논의 중	- 이란의 시리아 내 영향력을 견제하며, 시리아 新정부와의 외교 관계 정립 가능성 - ISIS 잔존 세력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보다 지역 동맹국 전개할 수 있음
중국-대만 양안 분쟁	중국: 대만 해협 내 군사적 압박 지속, 대만의 국제외교 활동 차단 시도	대만: 정치 체제 유지 및 미국, 일본과 군사협력 강화	- 대만에 대한 방어 지원 강화와 무기 판매 지속 + 방위분담금 증액 압박 -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인공섬 건설 및 군사 기지화	주변국(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 미국과 군사협력 강화	-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강화 -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체계 강화 및 중국 군사력 견제
이란 핵문제	이란: 핵능력 확대 및 NPT 탈퇴 위협과 더불어 협상 재개 의지도 표명	서방(바이든 행정부, EU 등): 이란핵합의(JCPOA) 복원 노력 및 제재 재개 가능성 경고	- 최대 압박 정책 재개, 기존 제재 집행 강화 및 추가 경제 제재 도입 - 직접적인 군사적 옵션 활용은 지양, 외교적, 경제적 또는 비군사적 조치 강구 - 핵 프로그램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역대 영향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가능성

자료 : 각종 언론 자료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시사점) 한국은 거래지향적 국제질서로의 변화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자·양자 전략을 병행해야 함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다양한 비용 청구와 외교적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강화할수록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나설 필요도 존재

강 성 현 선 임 연구 원 (2072-6221, shkang@hri.co.kr)

② 글로벌 관세전쟁의 시작

- (의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세계 각국의 연쇄적인 관세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에도 큰 피해를 유발할 전망
- (내용)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보다 강력한 통상정책이 추진될 전망으로 각국의 반발 역시 강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對 중국 관세인상 조치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 축소는 물론 공급망 정책을 통해 FDI 유입 규모 확대라는 성과가 있었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을 제외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對 중국 관세인상 조치가 시작된 2018년 대비 2019년 對 중국 수입은 873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736억 달러 축소
 - 조세 감면이나 공장부지 제공 등의 인센티브 중심 공급망 정책으로 FDI 유입 규모도 2017년 약 4조 달러에서 2020년 약 4.6억 달러로 대폭 증가

< 트럼프 1기 미-중 관세인상 조치 >

< 트럼프 1기 행정부 통상 관련 성과 >

일자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조치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조치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총수출(억 달러)	15,467	16,641	16,452	14,314	
'18. 07. 06	① 340억불 25%	① 340억불 25%	對 중국	규모	1,304	1,203	1,066	1,247
				비중(%)	8.4	7.2	6.5	8.7
			총수입(억달러)	23,429	25,427	24,984	23,366	
'18. 08. 23	② 160억불 25%	② 160억불 25%	對 중국	규모	5,056	5,395	4,522	4,356
				비중(%)	21.6	21.2	18.1	18.6
'18. 09. 24	③ 2,000억불 10%	③ 600억불 5~10%	對 중국	규모	5,056	5,395	4,522	4,356
				비중(%)	21.6	21.2	18.1	18.6
'19. 05. 10	③ 2,000억불 25%	-	무역수지(억 달러)	-7,962	-8,787	-8,532	-9,052	
'19. 06. 01	-	③ 600억불 5~25%	對 중국	규모	-3,752	-4,192	-3,456	-3,108
				비중(%)	47.1	47.7	40.5	34.3
'19. 09. 01	④ 1,120억불 15%	④ 750억불 일부 5~10%	FDI (유입, 조 달러)	3.95	4.18	4.40	4.6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의 통계를 이용해 작성.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경험을 살려 무차별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익 추구는 물론 대외 군사·외교·안보 등 타 분야 정책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상호무역법 제정, 보편관세 도입, 對 중국 관세 강화, 무역협정 재협상¹⁾과 같은 무차별적인 통상정책 변화를 예고

<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통상정책 >

구분	주요 내용
① 상호무역법 (Reciprocal Trade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 상대국의 對 미국산 제품 관세가 미국보다 높다면 보복관세 부과 · 공화당은 통상정책 강령에 따라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표
② 보편관세 (Universal Baseline Tari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보호 및 무역수지 적자축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수준의 관세 부과 · 트럼프 2기 경제팀 매월 2~5%씩 점진적 인상 방침 표명
③ 對 중국 관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관세율 60% 또는 그 이상) · 공화당은 對 중국 최혜국 지위 박탈, 필수품(자동차 포함) 수입 단계적 폐지 주장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테무, 쉬인, 알리바바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소액 면세한도(800달러) 폐지 가능성 ·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한 중국제품 우회 수출 경로 차단
④ 무역협정 재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있어서의 원산지 규정 강화 · 한·미 FTA는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이 있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와 광범위한 재협상 가능성

자료 : 언론 등 각종 보도자료 종합.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현실화 시 보복관세를 비롯해 각국의 반발을 유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 19세기 말 영국-프랑스, 프랑스-이탈리아, 미국-캐나다 간 관세전쟁은 무역 감소, 물가 급등 등 상호 경제적 피해를 유발해 세계적인 불황 장기화 유발
 -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2만여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 부과, 세계 각국의 보복관세와 수입제한, 환율통제 등을 유발하는 등 전 세계적 갈등을 유발하고, 대공황 심화 요인으로 작용

○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는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민관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추진이 필요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1) 미국은 2024년 12월말 현재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등 총 20개국과 FTA를 체결, WTO.

< 참고 : 주요 관세전쟁 사례 및 19세기 주요국 시기별 연평균 경제성장률 >

< 주요 관세전쟁 사례 >

국가	관세명/조치	주요 내용	영향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스와의 무역협정 폐기(188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프랑스는 보복관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간섭을 위한 이탈리아·독일·오스트 리아 3국 동맹 (1882~1915년) 지속
영국 프랑스	프랑스의 멜린관세 (18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브던-슈빌리에 관세협정(1860년) 폐기 모든 교역국에 대한 일괄 관세, 상호 협정국 최소 관세(5~20%), 주요 농산 물 관세 임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식품 물가 25% 이상 상승
미국 캐나다 & 미국 세계	미국의 호혜조약 폐기 (186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해 미국의 65개 기업 캐나다 이전 1889~1892년 미국 농산물의 對 캐나 다 수출 급감
	맥킨리 관세법 (Mackinley Tariff Act, 18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품 전체 평균 관세율 38.0%에서 49.5%로 인상 	
	딩글리 관세법 (Dingley Tariff, 18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품 전체 평균 관세율 57.0% 	
미국 세계	스무트-홀리관세법 (Smoot-Hawley Tariff Act, 19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만여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 부과 세계 각국 보복관세, 수입제한, 환율통 제 등을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교역량 66% 감소(1929~1934년) 세계 GDP 15% 감 소(1929~1932년) 대공황 심화

자료 : Eichengreen, B. and O'Rourke, K. H.(2009). A Tale of Two Depressions, Unpublished Manuscript; 양동휴(2009).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 금융경제연구, 2009.1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언론 등 각종 보도자료 종합.

< 19세기 주요국 시기별 연평균 경제성장률 >

(단위 : %)

구분	1860~1869년	1870~1879년	1880~1889년	1890~1899년
미국	-	4.4(1871~1879년)	4.0	3.9
영국	1.7	2.0	2.7	2.2
독일	2.7	2.0	2.5	3.4
프랑스	1.8	0.0	2.1	2.5
캐나다	-	2.1(1871~1879년)	3.8	3.4
이탈리아	1.1(1862~1869년)	0.8	1.2	1.5
일본	-	2.1(1871~1879년)	2.0	3.3

자료 : <https://www.rug.nl>, Maddison Database 2010, 현대경제연구원.

주 : ppp(purchase power parity; 구매력평가) 기준, Geary-Khamis 방식에 의거 추정된 각국 GDP 기준 추정.

③ 미국, 경제적 예외주의(American Economic Exceptionalism)²⁾의 시대

○ (의미) 세계 경제 둔화에도 나홀로 성장세를 유지한 미국의 '경제적 예외주의' 개념이 재부각 된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

- 최근 미국의 경제적 독주로 미국과 非미국 국가 간 경기 차별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정권 출범으로 그 현상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내용) 미국은 2024년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이 부진했던 것과 달리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 모두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2025년에도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등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될 전망

- 2024년 미국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강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며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

-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강한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성장률과의 차이가 2000년대 평균(△1.8%p)에서 2020년대 평균(△0.4%p)으로 축소
- 특히, 2024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잠재성장률(2.0%)을 큰 폭 상회하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선진국(1.8%), G7(1.7%)의 평균적 성장 수준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즉, 최근 미국 경제는 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 GDP의 26.5%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임에도 성장률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인 이례적 상황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³⁾

< 세계 및 미국 경제성장률 및 격차 >



자료 : IMF, Bloomberg.

< 주요국 경제성장률(%) >

권역 및 국가	2023	2024
선진국	1.7	1.8
G7	1.9	1.7
미국	2.9	2.8
일본	1.7	0.3
독일	△0.3	0.0
프랑스	1.1	1.1
캐나다	1.2	1.3
영국	0.3	1.1
이탈리아	0.7	0.7

자료 : IMF.

2) 1831년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미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는 구분되는 특별함을 갖고 있다는 뜻임.

3) 세계 GDP의 16.6%를 차지하는 중국은 2024년 4.8%로 잠재성장률(4.7%) 수준의 성장에 그쳤으며, 그 다음으로 큰 유로존의 경우 2024년 0.8%로 잠재성장률(1.0%)을 하회하는 성장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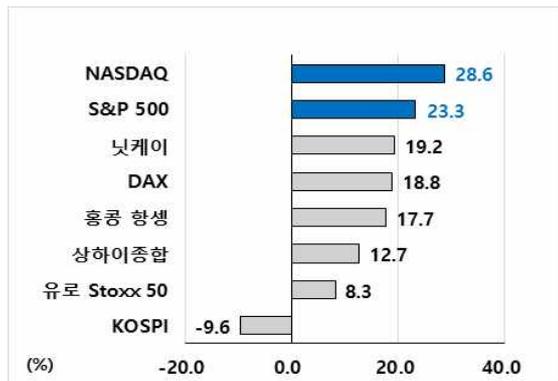
-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 미국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 내수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지표의 강세가 지속 중인 상황
 - 미국은 고물가, 고금리 여건에도 개인소비지출, 민간투자 등 강한 내수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지속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非미국 주요국 내수가 부진했던 점과 크게 대조
 - 한편, 실물 경기 호조세는 투자심리 등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강달러, 주식시장 호조 등 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의 독주가 관찰4)
-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로 향후 미국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非미국 국가들과의 경제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전망
 - 트럼프 2기는 신자유주의(감세, 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설명되는데, 미국 우선주의, 친성장 정책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경기 호조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경기선행지수 또한 상승세를 지속 중인 상황
 - 한편,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수입 시장인 중국의 경우 미약한 내수, 미·중 갈등 등으로 성장 둔화가 전망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미국과 非미국간 경제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미국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U.S. BEA.
주 : 전기비 연율 기준.

< 주요국 주가지수 상승률 >



자료 : Bloomberg.
주 : '23년 말 대비 '24년 말 기준.

- (시사점) 미국의 경제적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새롭게 개편될 글로벌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 시장과 관련된 신규 투자처 등을 적극 발굴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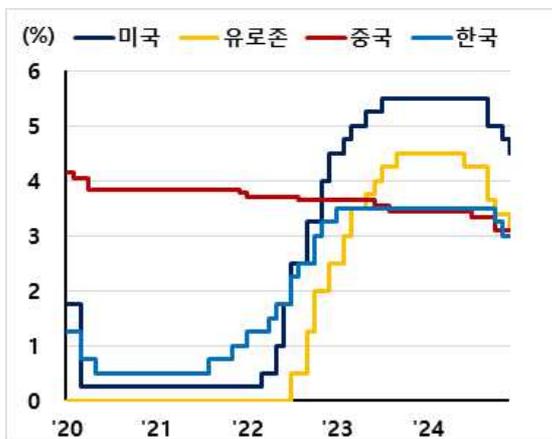
신 지 영 연 구 위 원 (2072-6240, jyshin@hri.co.kr)

4) 달러인덱스는 '23년 말 101.3p에서 '24년 말 108.5p로 약 7.1% 상승. '25년 1월 10일 현재 110.0p.

④ 다시 시작된 부채(負債)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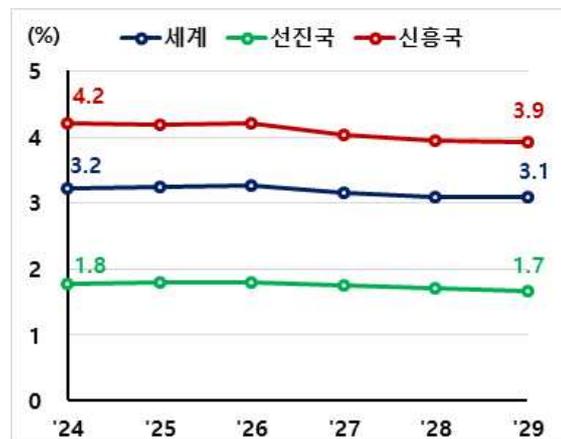
- (의미) 주요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부채가 재상승할 가능성 확대
 - 고금리 시대에 감소하였던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여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내용)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흥국을 중심으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향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이어질 전망
 -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는 글로벌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완화 기조로 전환
 - 미국을 제외한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향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단, 미국의 경우 물가의 하방경직성, 고용 호조세 등으로 긴축 기조로의 재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작으며, 완화 기조 속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임

< 주요국 기준금리 >



자료 : Bloomberg.

< 2025~2029년 경제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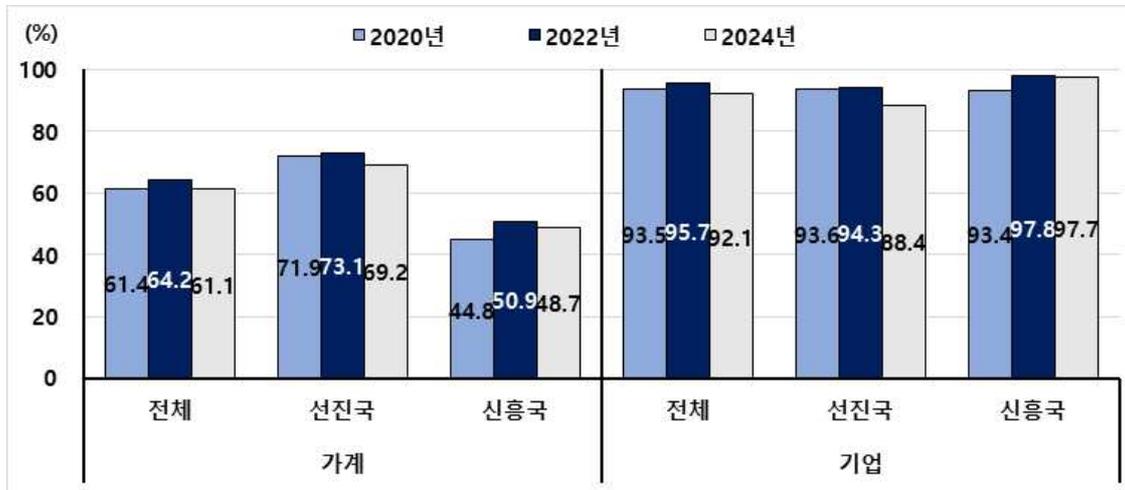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4.

5) 세계 물가상승률(% , 전년비): ('22) 8.6 → ('23) 6.7 → ('24) 5.8 → ('25E) 4.3 → ('26E) 3.6

- 이에 그동안 감소하였던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확대된 상황

- 2022년 대비 2024년 전 세계 GDP 대비 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은 각각 3.1%p, 3.6%p 감소
- 한편,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2020년 수준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감소한 반면, 신흥국의 부채 비율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의 부채 비율이 조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기로 진입함에 따라 신흥국의 부채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대

< GDP 대비 가계 및 기업 부채 비율 >



자료 : BIS.

주 : 각 연도 1분기 기준.

- 현재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약화된 상황에서 부채의 증가세는 경제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큼

-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경우, 부채 증가에도 실질 부채 부담이 감소하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감소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와 같이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부채가 증가한다면 기업 부실 심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경제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시사점) 글로벌 부채 리스크의 국내 전이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부채 수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

⑤ 새로운 패권경쟁, AI

○ (의미)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윤리, 안정성 등 다방면에서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으며 새로운 패권경쟁 이슈로 부상

- 딥페이크(deepfake),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자율주행 오류, 산업로봇의 노동재해 유발, 자율살상무기의 테러 및 군사적 활용 등 AI의 오남용이나 설계 오류 등에 의한 개인적·사회적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비판 인식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는 물론 군사·안보적으로도 그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국가 차원의 패권경쟁이 확산되고 있음

○ (내용) AI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자 안보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으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AI 패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강화 중이며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전망

- 미국은 2016년 'AI의 미래에 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2024년 '첨단 AI모델 및 컴퓨팅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보고 요구사항(Reporting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nd Computing Clusters)'까지 총 13개의 전략과 법안 및 행정명령을 통해 AI 패권 유지를 꾀함⁶⁾
- 중국은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을 바탕으로 차세대 인공지능산업발전촉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년),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과기프로젝트 등의 국가전략을 통해 AI 관련 글로벌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함
 - 중국은 2030년까지 AI 핵심산업 규모를 1조 위안, 연관 산업 규모는 10조 위안 이상으로 성장시켜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함⁷⁾

6) 미국의 AI 관련 주요 전략, 행정명령, 법으로는 2016년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9년 'Maintain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2021년 'National AI Initiative Act of 2020', 2022년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2023년 'New Actions to Promote Responsible AI Innovation that Protects Americans' Rights and Safety' 등이 있음.

7) 国务院,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2017년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최근 미국과 중국 AI 정책동향 및 시사점,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2020-09.

- 이외에도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2017년에, 영국과 독일은 2021년에, 일본은 2022년에 국가 AI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
- 국가별 AI 경쟁력은 미국이 압도적인 1위로 중국 등이 추격 중
 - 2024년 현재 미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1위로 2위인 중국(미국 100 기준 54)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
 - 글로벌 100대 비상장 AI 기업도 미국이 69개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7개, 캐나다 5개,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3개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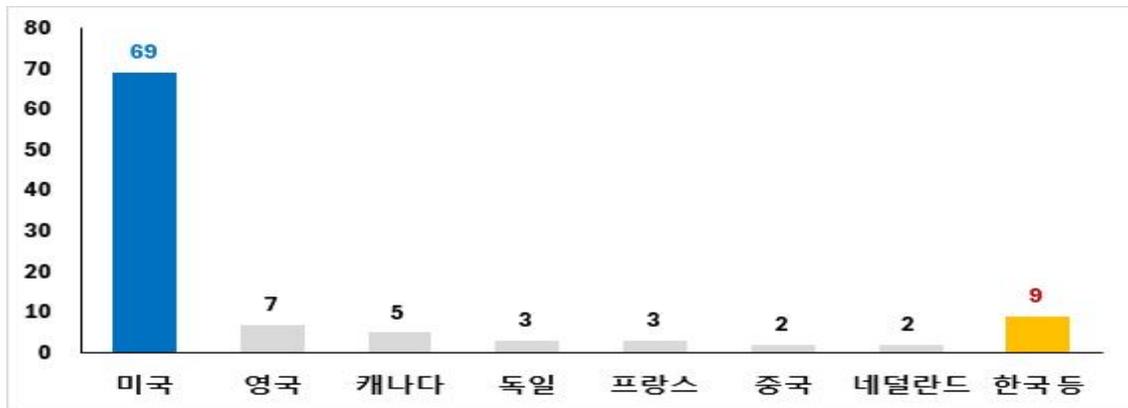
< 2024년 Global AI 지수 순위 >

순위	종합 점수	실행(Implementation)			혁신(Innovation)		투자(Investment)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	개발	정부전략	상업
1. 미국	100	100	100	96	100	100	83	100
2. 중국	54	26	66	70	54	69	66	48
3. 싱가포르	32	30	50	55	25	21	59	27
4. 영국	30	32	27	90	23	12	65	25
5. 프랑스	28	25	31	70	18	31	59	19
6. 한국	27	20	42	64	11	37	69	14
7. 독일	27	35	32	83	16	14	59	17
8. 캐나다	26	26	27	75	15	14	70	23
9. 이스라엘	26	27	25	47	17	19	35	29
10. 인도	24	42	15	90	10	13	55	14
11. 일본	20	15	46	54	8	13	54	13

자료 : <https://www.tortoisemedia.com>.

주 : 운영환경과 정부전략 1위(100)는 각각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임.

< 글로벌 100대 비상장 AI 기업 국가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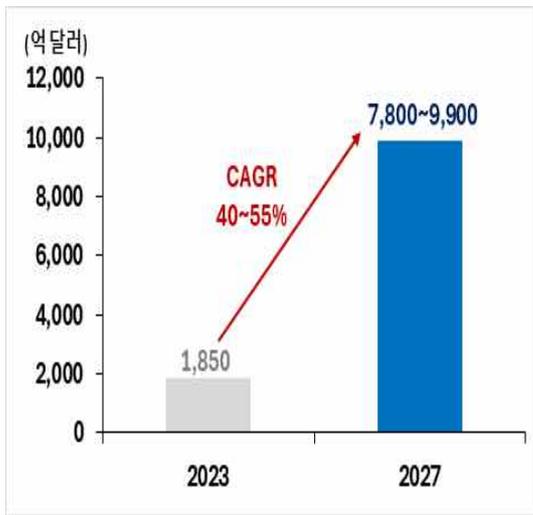
자료 : CB Insight, 2024년 4월 2일 및 각종 언론 보도자료 참조.

주 : 한국 등은 한국을 포함 9개국으로 국별 1개씩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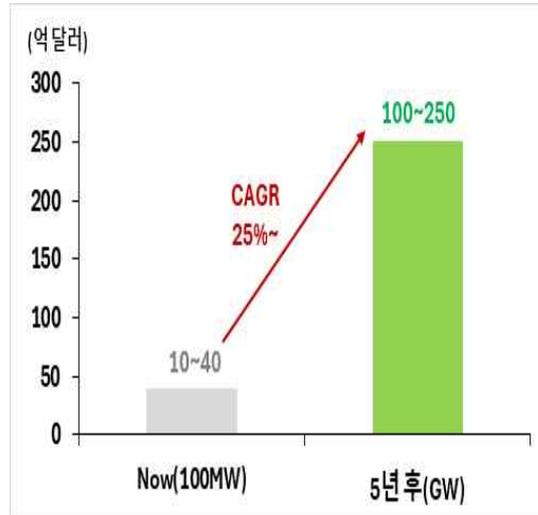
- 향후, 글로벌 AI 시장은 물론 주요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비용 또한 빠르게 확대될 전망

- 글로벌 AI 시장은 2023년 1,850억 달러에서 2027년 7,800~9,900억 달러로 매년 40~5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AI 운용을 위한 주요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경우, GW급의 대규모로 확장되면서 관련 비용도 최대 100~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⁸⁾

< 글로벌 AI 시장 전망 >



< 데이터센터 비용 전망 >



자료 : Bain & Company, Technology Report, 2024; 한국공학한림원, 한중일 기술협력조사, 2024년에서 재인용.

주 : 글로벌 AI 시장 전망치는 수익 기준.

- (시사점) 한국도 지난 2024년 9월 제1차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하여 ‘AI G3국가 도약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이니셔티브 발휘로 경제·사회적 측면은 물론 군사·안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AI 경쟁력 확보를 꾀해야 함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8) 부문별 글로벌 AI 시장은 IT 서비스가 2023~2027년 사이에 매년 40~50%, 어플리케이션 등 인프라 지원 부문이 60~8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한편, GW급 데이터센터 운용 비용은 적어도 200~250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현재 100MW급 운용 비용 10~40억 달러와 비교하면 연평균 25% 이상씩 비용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 이상, Bain & Company, Technology Report, 2004; 한국공학한림원, 한중일 기술협력조사, 2024년에서 재인용.

3. 2025년 국내 트렌드

① 한반도 긴장 속 군비경쟁 심화

- (의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한반도 내 군비경쟁 구도로 인해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 고조
 - 올해 북한은 우리의 국방중기계획과 유사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2021~25년)’ 을 마무리하는 해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우리 정부도 2025년도 국방 예산을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하는 편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에 주력
- (내용)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공세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 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목표로 함

<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5년) 주요 내용 > < 2024년 남북 군사력 순위 비교(145개국 기준) >

구분	목표 및 계획	구분	남한	북한	
핵무기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전체	5위	36위	
	핵무기 소형경량화	상비병력	9위	4위	
	전술핵무기 개발	지상군	전차	9위	2위
핵 투발 수단	15,000km 사정권 내 명중률 제고	장갑차	8위	21위	
	극초음속 탄두 개발도입	자주포	4위	2위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박격포	2위	3위	
재래식 군사력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공군	전투기	7위	5위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발사	공격용 헬기	5위	28위	
	군수공장 생산공정 현대화	특수임무기	8위	-	
재래식 군사력	500km까지 정밀정찰이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해군	잠수함	6위	4위
	다용도 전투장갑차 개발 및 생산	구축함	5위	-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호위함	3위	16위	
	무인공격기 개발 등	초계함	12위	13위	
		경비함	31위	4위	

자료 : 북한 매체 보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8차 당 대회 각 분야 결정 사항 이행과 과제』, 2024. pp. 114~115.

자료 : Global Fire Power 홈페이지 (<https://www.globalfirepower.com>) 참고

- 북한은 2024년 4월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6나형’ 및 10월 개량된 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등 미사일 시험발사 감행, 9월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 2025년 북한은 러북간 군사방산협력 확대와 주요 군수공장 현대화 등을 통해 군사분야의 성과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5년)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활용할 가능성 존재
-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면서 현대전에 대한 전법, 작전, 정보, 과학화를 강조)
 - 북한은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2024.12.23.~27)를 통해 현대전 대응을 강조
 - 드론전, 정보전, 전자기전 등 최근 우크라이나전 및 중동전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변화된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를 중시
- 글로벌 파이어 파워(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사대상 145개국 가운데 남한은 5위, 북한은 36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남한 총인구는 2024년 기준 세계 28위이며 상비병력은 세계 9위를 차지, 북한 총인구는 세계 55위이나 상비병력은 세계 4위 수준임¹⁰⁾
 - 지상군 부문에서는 남한이 대체로 2~9위, 북한은 2~2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군 부문에서는 남한이 5~8위, 북한은 5~28위, 해군 부문에서는 남한이 3~31위, 북한이 4~16위를 차지
- (시사점)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
- 한반도 정세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및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견인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이 해 정 수석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9) 통일연구원,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온라인시리즈 24-67, p. 5 참고.

10) Global Fire Power 홈페이지(<https://www.globalfirepower.com>) 참고.

② 부(負)의 정치적 경기사이클 시작

- (의미) 국내 정치 혼란이 정책 여건의 악화와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약화를 유발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성장세 둔화를 야기할 전망
 - 최근 국내 여건 고려 시 통상 정치적 경기사이클(political business cycle)이나, 新 정치적 경기사이클(neo political business cycle)의 특성과 다른 경기 흐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큼¹¹⁾
- (내용) 최근 국내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탄핵정국 등과 같은 부(負)의 정치 이벤트로 시장 기대가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1%대 성장 가능성 확대
 - 현재 진행 중인 탄핵정국과 유사했던 과거 2차례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경기 국면, 대외 여건 등의 상이가 국내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 차이를 유발
 - 경기 정점을 지나 수축이 진행 중이던 2004년 1~2분기의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실업률 상승 등에도 경제 성장세는 유지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 유지
 - 경기 확장 후반기였던 2016년 4분기~2017년 1분기는 민간소비 증가세가 대폭 하락하면서 성장률 하락을 경험, 원/달러 환율도 직전 2분기에 비해 상승

< 시기별 탄핵정국 시 거시경제 변수 추이 >

(평균,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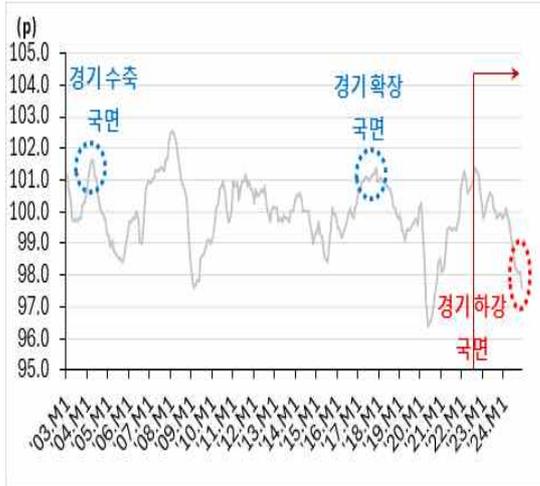
구분	'04년 1~2분기		'16년 4분기~'17년 1분기			
	직전 2분기	직후 2분기	직전 2분기	직후 2분기	직후 2분기	
경제성장률	6.2	3.0	4.3	3.2	3.5	3.6
민간소비	0.2	-0.8	1.0	1.8	3.4	3.0
설비투자	3.2	-0.9	4.8	16.1	1.6	18.0
건설투자	5.1	8.9	-0.7	10.9	10.0	8.6
실업률	3.8	3.5	3.5	3.7	3.6	3.7
소비자물가	3.3	3.4	3.9	1.9	0.8	2.1
원/달러 환율	1,166.27	1,178.24	1,123.38	1,155.59	1,141.78	1,131.2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2004년 1~2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4분기~2017년 1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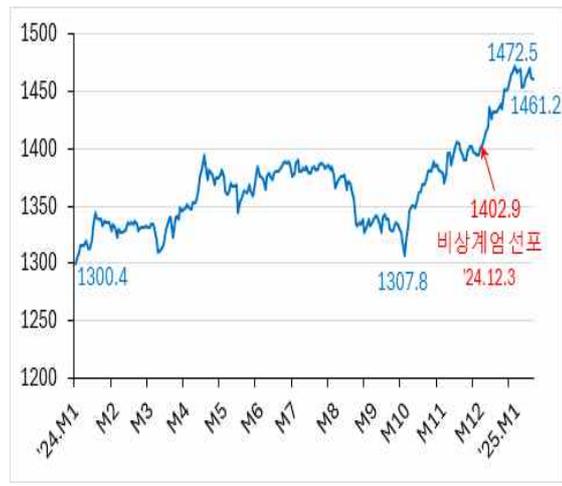
11) 정치적 경기사이클은 선거 전 성장률 제고 및 실업 축소를 위한 인위적인 총수요 진작책이 선거 후 인플레이션과 긴축 등으로 부작용을 유발하는 현상. 新 정치적 경기사이클은 선거 전 투자 축소, 선거 후 투자 재개의 악순환으로 경기 진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함.

<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자료 : 통계청.

<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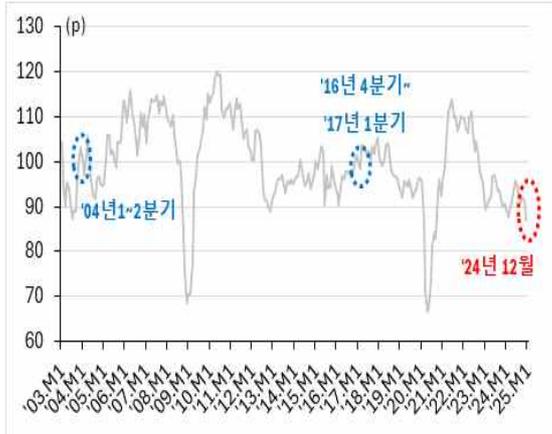
-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대내적으로는 경기 하강 국면 지속 속 빠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 고조 속 원/달러 환율 불안 현상 가중 등 과거와는 대내외 여건이 크게 다름

- 국내 경기는 제12 순환기가 진행 중으로 2022년 8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101.4로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수축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¹²⁾
- 기업심리지수는 지난 2024년 11월 91.5에서 12월에는 87.0으로 4.5p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소비자심리지수도 100.7에서 88.4로 12.3p나 급락하는 등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¹³⁾
- 한편, 원화 환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혼란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4년 12월 초 1,400원/달러 내외 수준에서 2025년 1월 중순에는 1,470원/달러 수준까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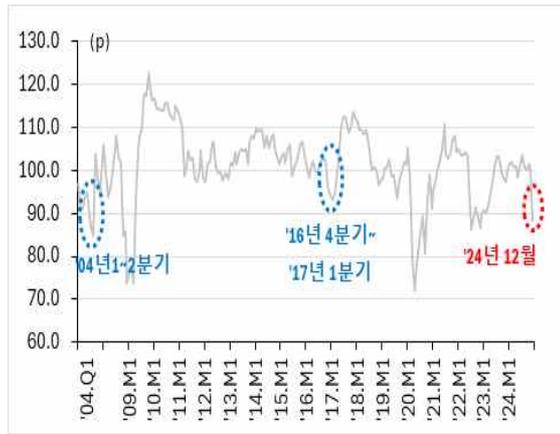
12) 2004년 1~2분기는 제8 순환기에 해당하는데 2002년 12월에 경기 정점을 찍고 2005년 4월 경기 저점까지 수축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며, 2016년 4분기~2017년 1분기는 제11 순환기에 해당하는데 2017년 9월 경기 정점까지 확장이 진행 중이었던 시기임. 통계청,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3월 2일.

13) 국내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 속도는 2004년 1~2분기에 기업심리지수 4.6p 상승(3월 대비 4월 변화), 소비자심리지수 4p(1분기 대비 2분기 변화) 하락, 2016년 4분기~2017년 1분기는 기업심리지수 1.9p, 소비자심리지수 1.0p(2016년 12월 대비 2017년 1월 변화) 하락해 이벤트 발생 직후 변동 폭이 최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한국은행.

< 기업심리지수(실적) 추이 >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소비자심리지수의 경우 2003~2008년까지는 분기, 이후는 월 기준임.

- 최근 주요 IB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내외 수준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성장 둔화가 불가피
 - 주요 IB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탄핵정국 전인 2024년 11월 2.1%에서 2025년 1월 1.8%로 0.3%p 하락, 낮게는 1% 초반대도 제기되고 있음¹⁴⁾

< 주요 IB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

구분	2023년	2024년 11월 1일 기준		2025년 1월 14일 기준	
		2024년(E)	2025년(F)	2024년(E)	2025년(F)
평균	1.4	2.4	2.1	2.2	1.8
최고		(평균)	(평균)	(평균)	2.3
최저					1.3

자료 : Bloomberg.

- (시사점) 현재 진행 중인 부(負)의 정치 이벤트가 장기화될 경우 대내외 리스크 관리 실패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한 1%대 성장 고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정치 정상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통해 대외 리스크 관리 여건을 마련해야 함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14) JP Morgan Chase, 2025년 1월 10일 전망치. Bloomberg.

③ 인내하는 소비자들

- (의미)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현재의 불황기를 견디기 위해 소비를 참는 소비자들이 증가
 - 코로나19 이후 보상 심리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였던 시기에서 소비를 참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시기로 전환
- (내용) 부진한 소비 여건이 지속되면서 소비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필수재 중심의 소비가 이어질 전망
 - 2022년 8월 이후 27개월간 경기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비 또한 하락세를 이어감
 - 2022년 8월을 정점(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1.4p)으로 수축 국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 11월까지도 저점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 2024년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월비 기준)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소비 또한 부진한 흐름을 지속
 - 경기 회복세 지연뿐만 아니라 높은 물가 수준, 실질임금 정체 등 소비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건이 지속된 영향
 - 2024년 소비자물가는 2020년 대비 14.2% 상승한 반면, 실질임금(2024년 1~10월 평균)은 2020년 대비 0.8% 상승한 것에 그침

< 소매판매 증가율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1)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기준
 2) 음영은 수축 국면임을 의미.

> < 소비자물가 및 실질임금 수준 >



자료 : 통계청, 고용노동부, 현대경제연구원.
 주1) 2020년 기준
 2) 2024년 실질임금은 1~10월 평균.

- 소비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를 참거나 식료품, 생필품 등 필수재 중심으로 소비하는 경향 확산

- 확장·수축 국면¹⁵⁾의 소매판매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수축 국면의 소매판매 증가율 평균은 -1.9%로 확장 국면의 3.1%에서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가전제품 및 오락, 취미, 경기용품의 소매판매 감소세가 두드러짐
- 한편, 음식료품 및 차량연료의 소매판매는 확장·수축 국면의 차이가 비교적 작은 편으로 필수재 위주의 소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

< 경기 확장·수축 국면의 상품군별 소매판매 증가율 평균 >

(단위: %, %p)

구분	확장 국면	수축 국면	차이	
내구재	5.7	-2.0	-7.7	
	가전제품	11.8	-8.8	-20.5
	통신기기 및 컴퓨터	2.8	-2.0	-4.8
준내구재	5.1	-2.6	-7.7	
	의복	6.2	-1.7	-7.9
	오락, 취미, 경기용품	10.7	-4.3	-14.9
비내구재	1.6	-1.5	-3.0	
	음식료품	1.0	-2.3	-3.4
	화장품	-1.8	-7.0	-5.1
	차량연료	1.6	-1.3	-2.9
합계	3.1	-1.9	-5.0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전년동월비 기준.

- 경기 개선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에도 전반적인 소비 부진 속에 필수재 중심의 소비가 이어질 전망

-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지속 전망 등으로 소비심리도 악화¹⁶⁾
- 향후에도 전반적인 소비 부진 속에 필수재 중심의 소비가 고착화될 가능성

○ (시사점)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한 경제주체의 기대 개선, 가격 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한 실질 구매력 확충 노력 등이 필요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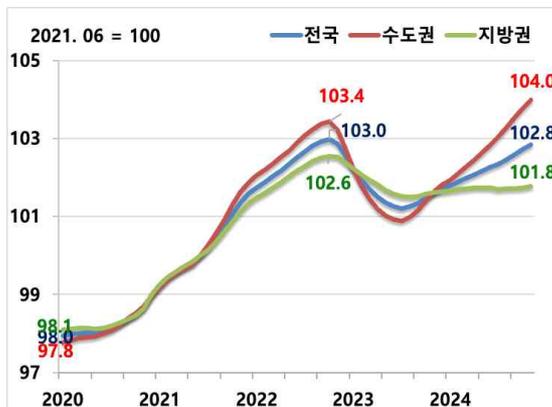
15) 제12순환기의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을 각각 '20년 6월~'22년 8월, '22년 9월~'24년 11월로 추정.

16) '24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에 비해 12.3p 하락한 88.4p로 이는 '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

④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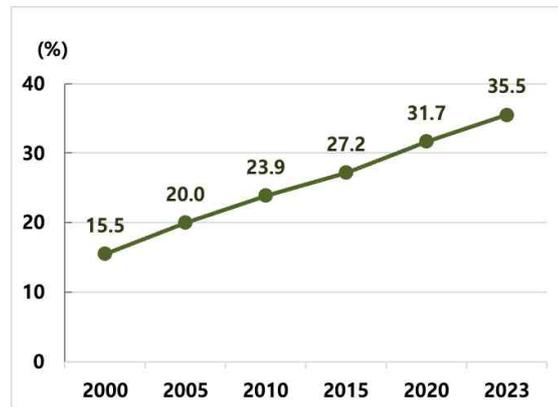
- (의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점차 개편될 것으로 예상
 -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거래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월세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월세통합가격지수(24.11월 전국 102.8, 수도권 104.0) 또한 상승 중
- (내용) 수요 측면에서 과거와 달리 전세거래보다 월세거래에 대한 거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 측면에서도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주택의 월세형태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3년 기준 35.5%를 기록, 향후 미혼과 이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2년 약 40%에 이를 전망
 - 전세사기사건 이후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 대출 규제 강화 및 국내외 주식, 가상화폐 등 금융자산 투자 증가로 아파트 시장도 보증부월세, 반전세 등과 같은 월세 계약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
 - 11월 누계기준 비아파트 시장의 월세 거래량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4년 수도권 66.5%, 지방권 77.2%를 기록
 - 향후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및 전세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을 확대 적용할 경우 아파트 시장에서도 월세거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월세통합가격지수 >



자료 : 부동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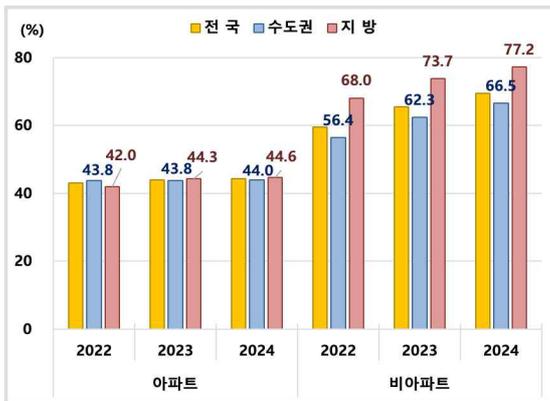
< 1인 가구 비율 >



자료 : 통계청

- 최근 글로벌 부동산 기업들의 수도권 임대주택 사업 신규진출 및 이미 국내에 진출한 투자기업들도 지속적으로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 확대 전망
 - 2024년 세계 3대 부동산 개발사인 미국 하인스(Hines)의 한국 주택임대시장 진출과 더불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영국계 부동산 투자회사 M&G Real Estate도 국내 임대주택 관련 투자 확대 예상
- 정부는 주거안정 정책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기업이 중심이 되는 민간장기임대주택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시장 선진화를 통해 20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함
 - 기존 민간임대시장은 비등록 및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일본, 미국 등과 같이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사업모델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라 임대료 등 규제완화, 세제 및 금융 지원, 부지 공급 등을 통해 장기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월세 거래량 비중 >



자료 : 국토부, 11월 누계기준

< 민간장기임대주택 육성 방안 >



자료 : 국토부,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 (시사점)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약화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산업적 측면에서 건설기업들에게 장기임대주택 분야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⑤ 진격의 메이드 인 K

- (의미) 전세계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가 콘텐츠를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수출, 관광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
 - 영상, 음악 콘텐츠에 국한되어있던 한류가 한국 문화 전반 및 실질적 소비로 이어지면서 거시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내용) 최근 전 세계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국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
 -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음악 및 영상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을 넘어 주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문화적 위상이 강화
 - 2024년에도 K-drama의 글로벌 흥행, K-pop 아티스트의 빌보드 메인차트 Top5 진출 등으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재확인
 - 특히, 유력 OTT 플랫폼의 글로벌 차트 상위권 대부분이 코로나19 시기 공개된 영어권 작품인 반면, K-drama 작품이 2024년 공개된 비영어권 작품 중 유일하게 입성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입지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
 - 이 밖에도 노벨문학상 수상, LCK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 등으로 출판, 게임 분야까지 문화 콘텐츠 전반에 한류가 확산하면서 2024년 상반기까지 콘텐츠 산업 매출 및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넷플릭스 글로벌 TOP10(Show 부문) >

제목	시청 수	공개일
오징어게임1	265,200,000	2021.9.
웬즈데이1	252,100,000	2022.11.
오징어게임2	152,500,000	2024.12.
기묘한 이야기4	140,700,000	2022.7.
다머	115,600,000	2022.9.
브리저튼1	113,300,000	2020.12.
퀸스갭빳	112,800,000	2020.10.
브리저튼3	106,000,000	2024.6.
종이의집4	106,000,000	2020.4.
루팡1	99,500,000	2021.1.

자료 : Netflix Tudum.

주 : 작품 공개 후 91일간 집계 기준이며, 오징어게임2는 91일이 경과되지 않아 향후 순위 상승 가능성(25.1.15. 기준).

< 콘텐츠 산업 매출액 및 수출액 >



자료 : 통계청, 한국콘텐츠진흥원.

주 : 2024년 상반기는 2023년 상반기 대비.

- 한편,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의 매출과 수출이 성장
 - 2024 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류 경험자의 66.1%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경험하고, 50.7%는 한국 제품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실례로 매운 라면 등 K-food의 유행으로 관련 기업의 수출이 전체 매출의 약 82.0%까지 급증하였으며, K-beauty의 인기로 국내 유명 헬스&뷰티 전문 스토어가 외국인 관광 필수 코스로 소개됨에 따라 매출이 크게 성장
 - 이러한 한류 콘텐츠와 소비 증가는 개별 기업의 실적을 넘어 거시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문화 콘텐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재 수출의 경우 총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점, 2020년을 제외하고 전체 수출에 항상 양의 기여도를 나타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비재 수출이 활성화된다면 향후 수출 경기 하방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해 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 여행수지 적자 개선 등의 효과도 가능할 것임
- ※ 외국인 관광소비 증가율(한국관광데이터랩, %) : ('22) 166.8 → ('23) 141.2 → ('24) 33.9

< S사의 면스낵 매출 및 수출 비중 > < 수출 증가율 및 가공단계별 기여도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 '24년은 3분기 누적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24년 증가율 및 기여도는 '23년 11월 누계 대비 '24년 11월 누계 기준.

- (시사점) 한류 콘텐츠의 강세가 문화적 현상을 넘어 소비재 수출, 관광업 등 연관 산업까지 긍정적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지원,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

신 지 영 연 구 위 원 (2072-6240, jyshin@hri.co.kr)